

65세 백신접종 시작... “다른 방법 있나” vs “여전히 불안”

국내 고령층 대상 첫 접종, 기대 큰 편
 “기저질환 있어도 낫짜 되면 맞을 것”
 고령자 가족 “부모님 빨리 맞으셨으면”
 일부는 부작용 우려에 접종 원치 않아

23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령층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많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반응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영식(71)씨는 이날 “신문을 보면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백신을) 맞을 것”이라며 “이러쿵저러쿵 해도 코로나가 정리되려면 백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씨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면역력이 약해서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니까 맞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신모(67)씨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위험하

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당뇨가 있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없진 않다”면서도 “집에 손주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해서 백신 맞는 시기가 되면 바로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료하신 부모님택에 그동안 잘 못 갔는데 백신 맞고 나면 더 자주 갈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광균(74)씨도 “접종 날짜가 되면 맞을 것이다. 당뇨가 있지만 접종 맞고 30분 정도 대기한다고 하니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을 둔 시민들도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봤다.
 71세 외할머니가 있는 염태림(27)씨는 “AZ 백신이 말 많긴 한데 마음 같아선 (외할머니가)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지병이 따로

없어서 더 안이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을 가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91세 아버지를 둔 이모(51)씨도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맞는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접종 날짜가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갈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부작용 가능성으로 고령자 가족이 백신을 맞지 않길 바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탐카페 회원은 “부모님에게 백신 맞지 말고 그냥 조심해서 다니시라고 싶다”며 “왜 노인분들 화이자 안 놓고 위험성 있는 백신을 놓는건지 너무하다”고 울렸다.
 다른 회원도 “해외 거주 중인데 60대 이상 분들은 1차 때부터 팔에 통증 많이 느끼고 2차 접종 때 거의 하루 정도 심하게 앓는다고 들었다”며 “그



거 보고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웬만하면 맞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지역사회 내 고령자 접종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내달 1일(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2일, 5일) 75세 이상(화이자) 접종을 시작으로 5~6월 65~74세(AZ) 대상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소독하는 의료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이 발생해 일주일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온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소독하고 있다.

후임병들 때리고 추행한 20대 선고유예, 왜?

참된 용서 구해 피해자들이 선처 탄원

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5일 사이 자신이 복무 중인 강원도 모 군부대 소초 생활·상황실에서 후임병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후임병의 귀를 붙잡아 핏자, 속옷을 입고 누워 휴식 중이던 후임병에게 '엄덩이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지'라면서 중요 부위를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 사이 후임병 3명을 7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매일신문 5·18 모욕 만평 사과하라” 대구 시민사회 규탄

“국민 비판에도 반성 없어...반윤리적인 행위”



대구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진압 장면에 빚대 비판한 매일신문 만평을 규탄하고 나섰다.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 137개 지역 시민단체·정당은 23일 오전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매일신문 만평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한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은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와 19일 지면에 ‘집 없

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 제 목의 만평을 게재했다.
 만평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군인으로 의인화한 건강보험료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9억원 초과 1주택자를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을 그렸다.
 매일신문은 비판이 일자 홈페이지에서 만평을 삭제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만평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무고한 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회화화한 범죄 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다”라며 “도덕적 문

제를 넘어 5·18역사왜곡특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매일신문은 지난해 8월에도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의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됐다”며 “국민들의 비판에도 반성 없는 입장문만 게시해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매일신문 공식 사과문 전면 게시, 매일신문사 사장 사과, 만평 작가 퇴출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매일신문사를 함의 방문해 편집국장 등과 면담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 광주시민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건 일도당토않은 주장”이라며 “다만 만평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해 인터넷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매일신문 지부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올린다. 사측은 이번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